

사라지는 기계식 주차장...주차난 심화 우려

건축허가 받으려 설치해 놓고 유지비용 부담 등 이유 철거 붐 광주 5년간 282곳 철거...건물주들 시 조례 이용 잇단 철거 신청 주차면수 줄어 이면도로 불법주차 등 초래...자치구들 '골머리'

광주지역 일부 건물주들이 잇따라 기계식 주차장 철거를 신청하고 있어 주차난 심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건축법상 건물 설치 시 건축당시 기계식 주차장으로 주차면수를 확보해 놓고, 개정된 광주시 주차장 조례를 이용해 비용 등 관리 부담이 큰 기계식 주차장 철거를 신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광주시와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광주지역에서 철거허가가 난 기계식 주차장은 총 282곳에 달한다.

건축법상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연면적 당 최소 주차면수를 확보해야 한다. 이에 건물주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적은 부지에 주차면수를 늘릴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했다.

하지만 건물주들은 2018년 한화연 광주시 주차장 조례를 약용해 최근 기계식 주차장 철거 신청을 하고 있다.

지난 2일 남구청 홈페이지에는 '남구청 주변 아파트 공사로 인해 교통사고 및 주차장에 관련 꼭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게시됐다.

광주시 남구에 건물을 소유 중이라고 소개한 A씨는 "기계식 주차장 이용객이 적다. 차라리 7면 기계식 주차장을 없애고 노면 주차장으로 바꿔 주차면수를 3대로 해달라"고 주장했다.

광주일보가 최근 A씨의 건물에 가보니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은 한대도 없었고 인근 이면도로는 불법 주차차 차량들로 가득차 있었다. 기계식 주차장은 사용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사용법도 적혀 있지 않아 사실상 방치돼 있었다.

민원을 접수한 남구 관계자는 난처하다는 입장

이다. 철거허가를 내주면 건물 인근은 심각한 주차난을 초래할 수 있고, 허가를 하지 않으면 광주시 조례에 반하기 때문이다.

결국 남구 교통지도과 담당자는 광주시에 관련 조례 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광주시는 노후화 된 기계식 주차장치가 최근 생산되는 차량과 규격에 맞지 않고 운전 미숙으로 안전사고도 빈번히 일어날 뿐 아니라 고장이 잦고 부품수급에도 어려움 겪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조례를 개정했다.

5년 이상 된 2단 이상 기계식 주차장치의 경우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을 경우 철거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 경우 확보해야할 법정 주차대수를 기존 설치대수의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최근 광주지역 건물주들이 이처럼 완화된 주차장 조례를 이용해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자치구 담당자들의 설명이다.

기계식 주차장을 운영하는 건물주는 2년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주기적으로 정기점검과 정밀안전검사를 받는데 수백만원의 돈이 들어가고 고장이라도 나면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구는 지난해 말 광주시 서구 차평동 삼부지구 인근 변화가에 위치한 건물의 기계식 주차장 철거를 허가했다. 건물의 주차장은 12면의 주차면수를 기계식 주차장으로 확보했었지만 기계식 주차장을 없애면서 주차면수는 6면으로 줄어들었다.



광주시 남구의 한 기계식 주차장이 지난 2일 주차차량 한 대 없이 텅 빈 채 방치돼 있다.

서구 관계자는 "차평동의 경우 주차난이 심각해 주차면수를 줄이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광주시 조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적 문제가 없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이다"고 말했다.

심지어 75면의 주차면수를 없애겠다는 곳까지 나왔다.

광주시 남구 주월동 한 주상복합건물은 150면의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기 위해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고 있다. 철거 허가에는 법적으로 문제되는 점이 없어 이대로라면 기계식 주차장 철거를 허가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건물주는 기계식 주차장이 오래돼 위험하다는 명목으로 철거를 원하고 있지만 주차면수가 75면이나 줄어들 경우 인근의 주차난이 심각해질 우려가 높다.

최명기 동신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기계식 주차장을 노면 주차장으로 변경하면 주차면수가 절반으로 줄어 주차난은 불보듯 뻔하다"며 "일부 건물주들이 광주시 주차장 조례를 약용하는 사례가 있어 조례가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글·사진=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이혼 아내 감금 폭행 30대 항소심서 징역 2년 6개월

이혼한 아내를 감금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이승철)는 특수중감금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 30일 고흥군의 한 모텔에서 이혼한 전 아내 B씨를 2시간 30여분 간 감금하면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지난 2021년 8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2차례 음주운전을 한 사건과 4명의 피해자를 속여 4억 5000여만원의 편취한 혐의의 사건이 병합됐다.

A씨는 이혼한 아내가 '외도가 의심된다'며 모텔로 불러 청타이프로 묶고 휴대전화 잠금을 풀라고 요구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개 목줄과 허리띠로 전신을 100여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전 부인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전신을 100여차례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한 범행은 방법이 매우 가학적인 뿐만 아니라 자칫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사기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편 순천시, 50만원 인센티브

순천시는 이달부터 만 70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5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9년부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시행했으며 지난 4년 동안 1128명이 면허증을 반납했다.

지난해까지는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교통카드와 순천시사랑상품권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지급방식을 바꿨다.

신청일 기준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만 70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먼저 운전면허 취소를 마친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인센티브를 신청하면 된다.

추가로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반납 카드를 발급하면 전남 내 식당과 숙박업소·병원 등 126개 가맹점에서 5~30% 요금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운전면허가 전부 취소돼 운전할 수 없게 된다. 운전면허 재취득은 취소일 기준 1년 이후부터 가능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 5개 구청장도 5·18 교육과정 삭제 규탄

광주시 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정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전면 삭제(광주일보 1월 4일자 6면)한 것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광주구청장협의회는 8일 성명서를 내고 "5·18민주화운동 교육과정 삭제를 즉각 철회 할 것"을 요구했다.

구청장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18민주화운동 제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5·18 정신 헌법 수록'과 '오월정신 보편적 가치 회복'을 약속한 지 1년도 안돼 5·18민주화운동을 지우려한다"면서 "민주주의 발전과 계승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구청장들은 이어 "2022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은 그대로 둔 채 5·18민주화운동만 제외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며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역사적 평가를 통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상징이면서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덧붙였다.

김병내 광주구청장협의회 회장은 "정부는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고 시대착오적인 과오를 범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즉각적인 시정에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현대삼호중 사내하청 노동자 천막농성 돌입

블라스팅 작업자들 계약 해지 반발

단체 계약해지를 당한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블라스팅 작업자들이 추운 겨울을 길거리에서 지내게 될 전망이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9일부터 영암군 삼호읍 현대삼호중공업 정문에서 블라스팅 노동자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선박에 페인트칠을 하기 전 이물질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블라스팅 작업자들은 "지난해 12월 25일 협상에서 4대 보험 가입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해 원래의 임금보다 줄어든 사측의 시급제 임금을 수용하며, 해고된 노동자 40여명의 '전원 복귀'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이는 현대삼호중공업과 협력업체가 기존의 불법 물량팀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다"고 주장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가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집단하고 26일을 맞는 9일부터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고용노동부 면담, 조선소 순회투쟁 등을 진행하며 투쟁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블라스팅 작업자와 계약을 맺는 협력업체 측은 "납기일정 때문에 새로운 인원을 충원해 전원 복귀는 어려운 상황이다"는 입장이며, 현대삼호중공업측은 원청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현대삼호중공업 협력업체 블라스팅 노동자들은 '불법물량제 폐지와 4대 보험 가입' 등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작업거부를 하다, 사흘 뒤인 15일 업체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경매, 대박물건 신안군 단독섬, 1월 16일 입찰
낙찰시 100억 가치 있음
단독, 공동입찰 하실 분. 오천경매. 010-3605-5000